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춘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데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첫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위성 비례정당’ 출연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이 지배하는 미증유의 선거가 되고 있다.

이번 총선 판을 흔들 변수로는 경제 침체, 여야 공천 평가, 코로나 사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중도·무당층 표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선은 본질적으로 정권과 집권당에 대한 회고적 심판이 핵심이다. 이런 정권 심판론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우리는 지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사회, 경제, 문화, 종교 그리고 개개인의 일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바이러스의 전파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조심스레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정부와 언론들은 이야기한다. 하지만 지금이 서로가 더 조심하고 바이러스 방제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고 대구의 한 신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대구시는 낮이든 밤이든 마치 유령이 나올 정도로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을 때, 우리 광주는 ‘달빛 동맹’이라

기 고

서민 경제 활성화 성공 모델 ‘광주 상생카드’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

“혜택 쌓고 매출 올라 기쁨이 두 배, 너도나도 이곳저곳” 경쾌한 배경 음악과 귀에 쏙 들어오는 가사. 그리고 악어와 악어새가 등장하는 지역 광고를 본 적이 있는가? 상생(相生)의 상징으로 비유되는 악어와 악어새를 주인공으로 한 광주의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를 소개하는 영상 광고다.

광주 상생카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제적 자원도 많지 않고, 입지나 접근성도 유리하지 않은 광주시 입장에서 지역 자본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자본이 지역에서 선순환하게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발행하게 되었다.

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하나

첫째,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여부다. 현 정부의 양대 핵심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재인케어 등이 제대로 작동되어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그런데 현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민심의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6개월 시점에 실시한 여론조사(2019년 11월 12~14일) 결과, 경제 정책에 대해 긍정 27%, 부정 57%였다. 집권 초기에는 반대로 긍정 54%, 부정 17%였다. 대북 정책도 긍정(38%)보다 부정(49%)이 많았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에 긍정(83%)이 부정(7%)을 압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

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이다. 통상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정 철학이 반영되어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이 제시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군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런 철학적 기조 속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진영의 논리에 갇히고 공연과 배제의 정치가 판을 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셋째, 정부의 도덕성과 정체성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통해 특권과 차별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현 정부의 도덕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검찰 개혁은 사라지고 검찰 장악이 부각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 간의 갈등이 도를 넘었다. 누가 원칙을 지키고 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했는지 평가받을 것이다.

작년 12월 27일 여권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만들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은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 ‘쓰레기 가짜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을 알잡아 보고 눈속임으로 만드는 위성정당 앞길에 오직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17일 친문 성향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이 유례없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제1당이 될 것인가 여부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과연 어느 정당이 흡수와 반칙을 일삼고 있는지, 어느 정당이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지, 누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지, 누가 미래로 나아가는지를 기준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社 說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 장애학생 배려를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을 연기한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에 들어갔다. 한데 수어통역이나 자막이 없어 장애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습권 침해인 셈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전남대 장애 학생 73명 가운데 시·청각 장애 학생 30명과 조선포 장애학생 51명 가운데 시청각 장애 학생 15명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고 한다. 호남대(10명 중 청각장애 3명), 동신대(10명 중 시·청각장애 3명) 학생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실제 A(조선대·시각장애)씨는 “교수 음성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상이 자주 끊기는 데다, 혼자서는 강의의 골간 부분을 다시 찾아 듣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B(조선대 대학원·시각장애)씨도 “시각장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강의 외에 첨부된 도표나 그래프 자료를 읽어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지

원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다.

전문대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 C씨는 “온라인 강의가 자료 사진을 띄워 놓고 강의 목소리를 입혀 놓은 형식이라 입 모양조차 볼 수 없다”면서 “강의 해설 자막이라도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처럼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없어 청각장애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에서 제목과 소재뿐만 지적 불능이 심하다.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들이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강의와 수업을 급작스럽게 준비했을 것이란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수업을 설명하게 하거나 수업 내용을 자막 처리하는 등 이들을 위한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행정 당국에서도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탄력적 운영 돋보이는 고흥 노인일자리 사업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남의 모든 시·군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고흥군만이 유일하게 일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이라도 그만두어야 하지 않느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흥군의 조치를 이해할 만하다. 고흥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군민의 40%인 2만6천여 명에 달한다.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곳은 고흥이 전남에서 유일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다른 노인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고흥군이 다른 시·군처럼 17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하면서도 노노(老老)케어와 가가호호 급식

배달 등 4개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생계’와 ‘건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노노케어는 노인 310명이 토대 노인들 2명씩을 맡아 한 달에 10차례 찾아가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가가호호 급식 배달도 노인들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1주일에 2회 방문해 급식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고흥에는 독거노인만 해도 8000여 명이나 있는데 이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업 참여자는 일정 소득을 보장받고 이웃 노인들의 건강도 살피는 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무작정 중단하기보다는 감염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사업 참여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수시 현장 확인도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노인들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뒤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멈쳤다. 모든 경기가. 코로나19 광풍으로 스포츠 경기는 지금 ‘올 스톱’ 상태. 유럽에선 축구 리그가 모두 중단됐고 유로2020도 연기됐다. 손흥민은 오랜 부상에서 회복해 토트넘에 복귀했지만 뛰지 못하고, 이강인의 소속 팀 발렌시아는 선수단의 35%가 확진 판정을 받아 뒤숭숭하다. 구단들은 “수입도 건강만큼 중요하다”며 시즌 강행 욕심을 드러내지만, 이미 경기장은 폐쇄되고 관중은 떠났다.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시범경기 무실점 호투를 이어 가던 김광현은 스프링캠프가 닫히는 바람에 훈련도 귀국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토론토로 이전한 류현진은 캐나다의 입국 봉쇄로 발이 묶였다. ML 개막은 6월로 예정돼 있지만 아예 통제로 취소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IOC가 7월 정상 개최를 천명한 도쿄올림픽은 예선전에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확진자를 줄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염자가 태연히 옆에서 식사하고 같이 걸

어 다닐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도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민만을 앞세워 올림픽을 무리하게 치른다면, 대회 이후 겪게 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문화학자인 요한 하위징아는 “놀이하는 인간은 경기장에 갈 때 진지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경기장은 응축된 감정을 마음껏 폭발시키는 곳이다. 팬들은 경기장으로 달려가

본능적인 천국을 즐기다 다시 일상의 세계로 돌아온다. 그곳은 정신과 감정의 해방구다. 경기장 문이 닫히면 인간의 응축된 감정은 갈 곳을 잃는다”고 했다.

야구·축구 등 모든 경기장의 문이 닫혔다. 안방 스포츠 팬들도 손에서 리모컨을 놓은 지 오래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말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격리를 통해 쌓인 녹록한 감정은 어디에서 풀어야 할까. 혼돈의 3월이 지나가면 다음은 잔인한 4월이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